

의안 번호	844	<p>【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p> <p><b>검 토 보 고</b></p>
----------	-----	--

##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1. 8. 25(수)

가. 제 출 자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신성봉 의원 외 5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1. 8. 26(금)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1. 9. 6(화)

## 2. 제정이유

- 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와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 적용대상에 관한사항(안 제3조)
- 나. 계약체결 시 사업주의 책무와 대가 지급 시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현장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대가지급 게시 (안 제4조, 5조)
- 다.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의 직접지급사항 및 체불임금과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로자 상담(안 제7, 8, 9조)

라. 우수업체와 부진한 업체 평가관리 및 홈페이지 게시(안 11조)

#### 4. 참고사항

가.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기 관 명	종 류	법 규 명	제 정 일
울산광역시 북 구	조 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11.12.13
전라북도	조 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11. 4. 1
전라남도	조 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11. 7. 5
경상남도	조 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1. 6.16

#### 7.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 공사 후 임금체불로 인하여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의 어려움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솔선수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와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현재 광역단체의 경우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3개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정 기 시행하고 있으며

○ 조례 제정으로 관계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체불임금 방지를 위

해 술선수범하고 아울러 범사회적 체불임금 방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

[법률 제10719호, 2011. 5.2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건설경제과), 02-2110-8356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 건설 기술 관리 법 】

[시행 2010.10.13] [법률 제10250호, 2010. 4.12,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보기

국토해양부(기술정책과), 02-2110 - 8376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設計監理)·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 관리 및 운용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마. 건설공사의 감리
  -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사. 건설사업관리
  - 아.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제34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 관련 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1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5. "중대한 재해"란 건설재해 중 사망자 또는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이하"중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사업이 완료되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근로자 상담) 구청장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상담요구사 있을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도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구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